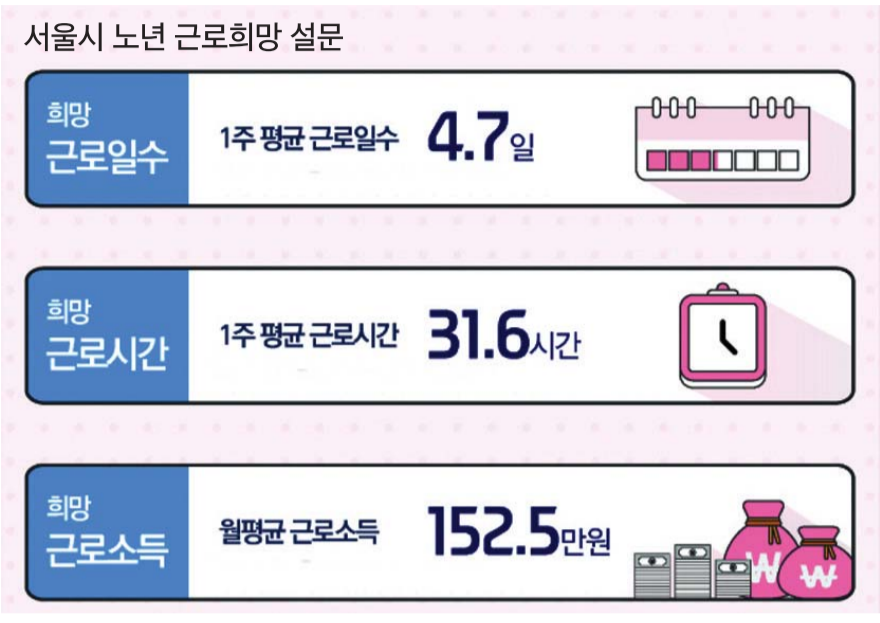


# ‘힘들고 돈 안돼’... 노인 10명 중 6명 “일하기 싫다”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노인 근로 조사**  
60세 이후 직장 취업시 애로사항 낮은 급여>차별>복지>노동강도 순  
활동시간·수당 차등화 작업 필요  
근로조건 개선해야 노년 근로 활기

서울에 사는 노인 10명 중 6명은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빈곤 감소, 건강 증진 등의 효과가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시에 따르면 65살 이상인 서울 시민은 141만6131명(2018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1004만9607명의 14.09%를 돌파했다. 고령사회에 들어선 것이다.  
고령 인구는 많지만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은 적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시에 거주하는 노인 3034명을 대상으로 취업 욕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취업 희망 응답자 1,125명 대상 /서울시복지재단

전체의 62.9%가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김정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서울 시민은 대체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일을 하더라도 단순 노무와 같이 노동 강도는 세지만 처우가 열악한 직종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0세 이후 취업한 이들이 직장 내

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급여가 54.6%로 1위를 차지했다. 나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28.1%), 휴식시간·휴가사용·편의시설 등 근로조건(18.8%), 강한 노동 강도(13.6%), 고용주·상급자의 비인격적 대우(3.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은 생계비 마련(61.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용돈 마련(18.9%), 건강유지(14.3%), 능력 발휘(2.1%), 시간 보내기(1.7%), 사람들과 사귀기(1.3%)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희망하는 근로소득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평균 152만 5000원이었다. 2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다.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33.8%), 100만원 미만(29.7%) 순이었다.  
강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당이나 급여가 생계비 마련이 목적인 노인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 유형에 따라 활동 시간이나 수

당을 차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노인들의 경제적 욕구 수준에 맞는 활동과 연계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도입했다. 사업 규모는 지난해 일자리 51만3000개에서 올해 61만개로 1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산은 1조2558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3442억원 늘었다.  
박정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은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권익보호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한다면 노인에 대한 노동권 관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복지 사업의 연계로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및 사회활동 참여 주체성과 적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마을회관·보도블록 공사, 주민이 직접 감독”

**서울시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3000만원 이상 시공에 참여  
여성 참여비율 40% 이상 ↑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 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선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하는 제도다. 배수로·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을 감독한다. 참가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

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이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되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 주거지 재생 영역으로 확대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감독자는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점검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3만원, 월 2~4회 한도)를 지원한다.  
시는 6월 중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 기획관은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며 “여성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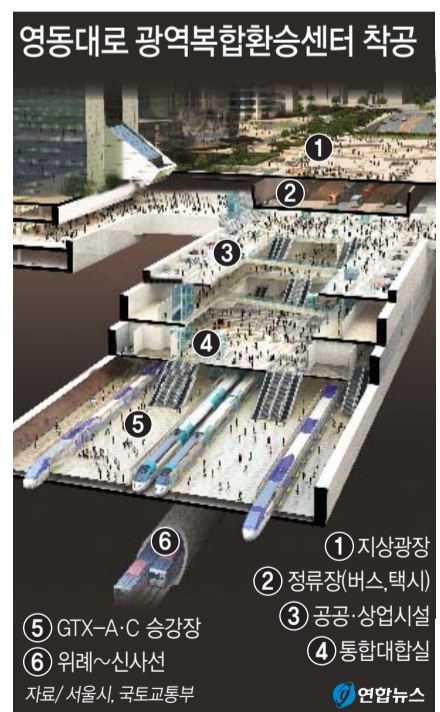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이 제로페이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 코엑스-잠실 지하로 잇는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추진  
올 12월 첫 삽, 2023년 개통 목표

서울에 코엑스와 잠실을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문 역할을 하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영동대로 삼성역~봉은사역 630m 구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도시철도(위례신사), 지하철(2·9호선) 및 버스·택시 환승시설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광역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통합역사 외에 버스환승정류장(52개 노선 운영 중), 주차장, 환승시설, 지상광장, 공공·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상광장에서 지하 4층까지 자연채광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며, 보행동선을 최적화해 평균 환승거리(107m)와 시간(1분 51초)을 서울역보다 3.5~4배 단



1 지상광장  
2 정류장(버스·택시)  
3 공공·상업시설  
4 통합대합실  
5 GTX-A-C 승강장  
6 위례~신사선  
자료/서울시,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해야 한다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 경기도시장군수협 “포승지구 매립지는 평택 땅”

당초인 기본계획부터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해 항만개발이 됐고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제공되는 물론 평택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천명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결정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만이 법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며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이보현 기자

##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실거래가 일원화

국토부서 데이터 취합해 정보 제공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해 시스템 간 차이 없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은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받아 공개해 취합 시점, 기준 등에 따라 정보가 달라 이를 이용하는데 혼란이 있었다.  
국토부가 실거래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서울·인천·경기도에서도 같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계약일 기준 10일 단위로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앞으로는 1일 단위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통일된 실거래 정보는 1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